◆ 28 수능(예시) 18~23번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이나 자율적인 사전심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 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㉔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㉕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㉖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㉗ 인용될 수 있다. ㉘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㉙ 부인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론, (나)는 인격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 배경을, (나)는 인격권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을, (나)는 인격권에 관한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업적 광고에 대한 심의는 사후에만 허용된다.
- ②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 ③ 공적 인물에 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
- ④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가 채택되었다.
- ⑤ 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검열이라고 판단된 것은 심의 시기와 관련 없이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언론의 보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법률에 규정된 기사삭제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①
-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닌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질문 2 인터넷 댓글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댓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문 3 보도 기사의 허위성이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기사의 허위성 여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21. ㉗을 바탕으로 ㉘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방송으로 인해 훼손된 인격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③ 인격권을 손상할 것이 명백한 방송이라면, 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④ 현저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⑤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22. ㉔~㉙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근거를 갖추어 피해 사실을 '밝혀 설명하고'라는 의미이다.
- ② ㉕ :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㉖ :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 ④ ㉗ : 신청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이라는 의미이다.
- ⑤ ㉙ : 검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23.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신문사는 공적 인물인 A가 불법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인 B는 포털 게시판에, 보도된 의혹 외에 A가 추가로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 사건이 커지자 '을' 방송사는 A의 부당 이익 수취에 대한 의혹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1주일 후 방영하겠다고 방송에서 예고했다. A는 방영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①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면, A는 '갑' 신문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군.
- ② A의 혐의가 무죄로 종결되고 A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을' 방송사에 해당 사실을 보도하라고 판결하겠군.
- ③ B가 게시한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 아니며 A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포털의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야겠군.
- ④ A가 명예훼손 책임을 '갑' 신문사에게 묻는다면, 법원은 A가 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의 책임을 완화하겠군.
- ⑤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을' 방송사가 방송하려는 내용이 진실이거나 A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군.

◆ 07년 9월 고2 19~22번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나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실과 사건 가운데 뉴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자가 선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의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뉴스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영향력, 시의성, 변화, 저명성, 근접성, 신기성,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발생 후 오랜 시일이 지난 사건보다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일수록 뉴스로서의 가치가 커진다. 또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변화의 폭이 큰 것일수록,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유명 인사가 관련된 사건일수록 뉴스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평범한 사건보다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이, 평화적인 상태보다는 분쟁을 야기하는 사건이 더 많은 뉴스 가치를 지닌다.

언론인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보도할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제작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이 뉴스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무조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뉴스로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것은 통과되고 어떤 것은 차단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일단 뉴스로 채택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등에 따라 뉴스의 보도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과정을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나 상사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정치 집단, 정부, 광고주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뉴스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자 스스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직접 취재하는 것은 기자의 기본 임무이다. 기자가 특정 취재원의 일방적인 정보로만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성과 공정성 모두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①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기준으로 보도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때로는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을 경우, 양쪽의 견해를 고루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정확성은 기사를 수용할 때 기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상반된 입장이 있는 사안을 다룬 기사를 볼 때 뉴스의 수용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를 명확히 파악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반된 두 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대립적인 두 주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쟁점이 있는 경우 논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명확한 사실적 근거가 없는 기사는 단순한 홍보용 기사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 위 글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점]

- ① 뉴스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 ② 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올바른 수용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 ③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기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한 글이다.
- ④ 뉴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 ⑤ 뉴스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언론의 소명 의식을 강조한 글이다.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방송국 뉴스 보도 관련 자료

[A] 취재한 기사의 목록

- (1) ◇◇노조 파업 - 한 달째 변화 없는 노사 대치
- (2) 연예인 K도 씨의 숨겨진 불우 이웃 돕기 선행
- (3)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황소
- (4) 평생을 불우 이웃을 위해 살아온 □□□ 옹
- (5) △△국 내전 발발, 오늘 아침부터 치열한 전투 개시
- (6) 독점 인터뷰, 내전 중인 C 국가의 반군 사령관, 앞으로의 계획 밝혀

↓

[B] 보도하기로 결정한 기사 목록과 보도 순서

- (1) △△국 내전 발발, 오늘 아침부터 정부군의 반격 시작
- (2) 독점 인터뷰, 내전 중인 C 국가의 반군 사령관, 앞으로의 계획 밝혀
- (3) 연예인 K도 씨의 숨겨진 불우 이웃 돕기 선행
- (4)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황소

- ① [A]와 [B] 사이에는 '게이트키퍼'의 절차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
- ② [B] - (1)을 1순위 보도 기사로 선택한 것은 '시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야.
- ③ [A] - (1), (4)가 보도에서 제외된 것은 '근접성'과 '갈등'의 요소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A] - (3)이 뉴스로 선택된 것은 '신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A] - (5)와 [B] - (1)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1. ①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한 보도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 ② 기자는 공정성보다 소신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나 여론은 항상 공정하다.
- ④ 뉴스 기사의 공정성 판단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⑤ 뉴스의 공정성 여부는 내용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비판적인 수용 활동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 < 보 기 > —

○○강 댐 건설 예정

환경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 댐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부족의 해결을 위해 ○○강 댐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여당 국회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사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댐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기자 —

- ① 쟁점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 견해가 제시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 ② 특정 취재원의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상반된 입장이 있는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반대 측 입장의 근거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상반된 입장의 두 주체를 여당과 야당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 계획을 주도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로 설정하는 것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된다.
- ⑤ 찬성과 반대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적인 근거가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아서 수용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 ㉔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 훼손·비판·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㉕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㉖ 맞부딪칠 수도 있다.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 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 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정 보도를 청구

하는 피해자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㉗ 실게 된다. ㉘ 이때의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는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불가하다. 민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정정 보도 청구권 및 반론 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㉙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나)는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가)는 권리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고, (나)는 권리의 실행 과정에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③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을 설명하였고,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를 비교하였다.
- ④ (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의 의의를 평가하였고, (나)는 다른 권리와 대비하며 권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⑤ (가)는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나)는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을 서술하였다.

21.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다.
- ④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 ⑤ 배려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22.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② 원 보도를 한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원 보도를 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③ 원 보도에 비해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하여 언론 매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 ④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⑤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3.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방송법 제6조 제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6조 제2항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② ㉡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③ ㉢은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A는 △△신문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A는 다음의 내용으로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10면에 ‘○○시 소재 동물 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지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시에 소재한 모 동물 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 투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물 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물 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동물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①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 ②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 보도를,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는 것이겠군.
- ③ A가 △△신문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 ④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⑤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신문에 실겠군.

25.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하면
- ② ㉡ : 기여하는
- ③ ㉢ : 충돌할
- ④ ㉣ : 게재하게
- ⑤ ㉤ : 증진하고

◆ 10-6평 38~42번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A]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리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38.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39.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40.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41.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42.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② 엇그제 비가 홀죽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 09 LEET 언어이해 38~40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치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파수견(watchdog)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파수견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국의 ① 전통적인 시각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독립 시기를 전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에 자유롭게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판적인 언론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정 헌법 제1조가 차후에 언론 기관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이 시각은 언론 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견제 가치'에서 찾는다. 그래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견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론법 학자 글리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법원이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언론 기관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직결된다고 밝힌다. 19세기 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예 훼손 소송의

건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진실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사의 수가 늘면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신문사들은 명예 훼손 소송을 신문 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수견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확대하였으나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1896년 시 공무원을 비판한 기사로 인해 벌어진 명예 훼손 소송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기사가 취재 보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신문의 파수견 역할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취재 및 편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글리슨에 따르면 파수견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8.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기관에 대한 언론 기관의 접근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 ③ 이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 ④ 언론의 상업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 ⑤ 이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39. <보기>에서 글리슨의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언론사는 파수견 기능을 내세워 명예 훼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ㄴ. 언론사는 명예 훼손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ㄷ. 언론사는 취재 보도 과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ㄹ. 법원은 언론이 공적 역할은 하지만 파수견 기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ㅁ.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명예 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40. ㉠을 통해 <보기>를 해석한 것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미국 시카고의 S 신문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업주들에게 뇌물을 요구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위장 술집을 차렸다. 한 달 후 S 신문사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20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기사를 3주간 연재물로 게재하였다. 관련 공무원들은 신문사의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 신문사는 자신들은 공익을 위해 보도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① 명예 훼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S 신문사의 면책 요건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 ② S 신문사의 위장 술집을 통한 취재 방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라도 S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S 신문사가 공무원의 비리를 장기간 연속으로 게재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다.
- ⑤ 공익을 위해 보도할 경우에는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S 신문사의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 08 MDEET 언어추론 17~19번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격권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 목적 또는 사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은 표현 자유권 내지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면 상품 판매와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다시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적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에 대한 역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통해 쌓아 온 명성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격권과 동일하게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이나 초상

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을 권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퍼블리시티권의 혼합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퍼블리시티권은 생존 중에 성명, 초상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사후에도 존속되는 권리이다.
- ② 신문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③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④ 퍼블리시티권은 양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격을,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18. ㉠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은?

- ① 권리자가 상품을 후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 ② 소비자들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떤 후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이 불식될 것이다.
- ③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아지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이용자 수익의 사회 환원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 ④ 이용자는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권리자가 상품의 질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규제할 것이다.
- ⑤ 권리자는 이용자의 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의 명성은 우연보다는 본인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인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시간, 자금, 기술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 명성을 얻게 된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ㄴ. 인격권은 성명, 초상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ㄷ.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표현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